

# 국가수사본부 신설 예고

경찰청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 차치경찰 내년에 도입

차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차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차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차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차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차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차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차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차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차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차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차안장(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보하고, 임기는 원인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이 불가능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권한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차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업무가 세분화돼 경찰청장, 시도차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차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



함담장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과 신임대사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함께 함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靑 "검찰개혁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할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직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을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직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로써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

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성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뉴스

###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 "K-뉴딜 체계적 추진 컨트롤타워 필요"

국주영은 도의원 "관련 사업들 각 부서서 산발적으로 추진" 조동용 도의원 "도내 빅데이터 총괄 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2일 2021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질의에 이어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차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간 예산확보에 노고를 다한 전북도실·국 간부들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이번에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전북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전북도의 K-뉴딜 추진 관련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총괄적인 예산안환 파와 및 종합계획 수립, 전문적인 자문위원 섭외 등 체계적

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한, "전북도의 인구정책도 각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은 출산, 육아, 교육 등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정책을 총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 확산 등 관련사업을 현재 환경분야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환경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관계 사업의 검토를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과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순도비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센터 건립과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금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을 전적으로 도비로 총괄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빅데이터 관련 중립적 사업예산 편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내에 빅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해 평가기준과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하며, "공기업 및 출연기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건립하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잼버리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도청현안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 불분명한 산출근거를 지적하면서, 추진을 위한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유호상 기자

###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 가용재원 증가 노력"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북도의 순수 가용재원이 7,447억 뿐이라며, 가용재원 증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2021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는 1조 1,462억원인데, 군특이양사업 3,822억원과 주민참여예산 199억을 제외하면 7,447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가용재원 규모 증가율을 0.29%로 매우 낮고, 향후 군특이양사업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가 자부재원 증대,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가용재원 증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해 도내 기업의 양적·질적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도가 도내기업 및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용재원이란 도비 총규모에서 인건비,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에 사용되는 도비를 뺀 금액이다. /유호상 기자

### 장애인·노인 등 이용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되나

민주 김윤덕 의원, 난청 겪는 사회적 약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 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도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이에 김윤덕 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효 문화 정책 토론회 개최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김은영(효자·2·3동) 의원은 2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효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체계적인 효(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효(孝)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실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 진행을 맡은 소승갑 전북도인복지문화연구원원 총재는 "효문화를 통한 우리 천년 전주 명성을 재정립을 강조했으며, 시대별 전북문화연구원 전담교수는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규섭 효문화연구원 전담교수는 "효행장려법의 제정이유에 대해 되짚어보며 현 전주시에 맞는 효 프로그램 실행"을 강조했다. 김은영 의원은 "전주시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효 실천 인식 확대와 노인의 부양에 대한 사회 전체의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노인복지향상 및 효(孝)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기초발제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관련 기관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